

민주 지도부·당직 구성 광주·전남 정치권 배제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구용 교수 대부분 당직 인선 친명 인사 배치 호남 정치권 인사 기용 거의 없어 차기 총선 물갈이 폭 커지나 관심

민주당의 지도부 및 당직 구성에 광주·전남 정치권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광주의 송갑석 의원이 친명(친 이재명) 진영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도부 진입에 실패한데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구용·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전남대 박구용 교수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서 나타났던 냉랭한 지역 민심과 차기 총선 등이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구용 최고위원 선임 등을 골자로 한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박 교수는 5·18 재단 기획위원장을 지냈고,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지역에서 손꼽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민심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광주·전남의 정치권보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재를 구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각각 호남과 영남 인사를 앉히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이 대표는 당의 심장부인 호남에선 원내가 아닌 원외의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영입해 혁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나머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의 인선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영남 출신의 노동계 인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에는 재선의 김병욱 의원이 선임됐다. 조직 사무부총장에는 이해식 의원이, 미래 사무부총장(제3사무부총장)에는 김남국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김병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의 전통적인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이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 대선 캠프에선 배우

자 실장을 맡았다. 4선의 김태연 의원이 민생경제 위기 대책위원장을, 3선의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대책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민주당은 앞서 신임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5선의 조정식 의원, 재선의 김성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재선의 안호영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전략기획위원장에 문진석 의원을, 초선인 박성준·김의겸·임오경 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임한 바 있다. 법률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민주당 내외에서는 이번 당직 인선을 두고 친명 친정체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주류 진영과 광주·전남 등 호남 정치권 인사들의 기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박구용 교수의 지명직 최고위원 기용을 두고는 참신함도 있지만 과연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교수가 친명 성향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원외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그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광주·전남 정치권이 지도부 진출 실패에 이어 다시 한 번 치욕적인 상황을 맞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되기 위해 자기발전에 나섰던 일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망신을 샀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이 냉랭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신뢰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차기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물갈이 폭이 커지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호남 민심이 지역 정치권을 넘어 민주당의 친명 독주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호남 홀대론'이 맞물린다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의 후폭풍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진로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의당 비례의원들 "총사퇴 권고 투표 부결에 무거운 책임감"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5일 '비례 총사퇴 권고' 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투표 과정과 결과를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의 혁신과 의원단의 쇄신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하나"라며 "불안정 노동자, 무주택자

와 세입자,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가장 소외당한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의원단 활동의 쇄신을 약속했던 비대위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총투표에서 확인된 의원들의 요구와 의지를 모아 혁신 재창당 결의가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재창당 결의안 채택 여부 및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오광록 기자 kroh@

국힘 '새 비대위' 구성절차 완료...8일 인선 마치고 출범

상임전국위·전국위 잇따라 열어 비대위 가능한 당헌개정안 의결 비대위원장 도로 주호영 유력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한차례 더 열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새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주호영 비대위'의 총사퇴에 따른 공식 해산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재적 인원 709명 중 찬성 415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결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결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비대위 설치 요건을 명확히 했다. 비대위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정립한 것이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정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인 만큼,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거나 결위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 비대위는 최고위로서 역할을 한다'는 규정을 통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과,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의 위원 9명 전원이 총사퇴를 선언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기존 비대위 위원들이 총사퇴함으로써 '비상 상황'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취지다. /연합뉴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남도의회 성평등 100분 릴레이 포럼...의원 12명 의제 제안

14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 성평등한 의정활동 계획도 밝혀

"이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전남 지역 사회를 위한 의견을 듣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포럼에 나선다.

전남지역의 마흔한 성평등 실태를 비롯, 현안 과제와 의원들의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알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여성가족재단과 전남양성평등센터는 오는 14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2022 전남도의회 성평등 100분 릴레이 포럼'을 연다.

포럼은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가 주도해 전남의 성평등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전남도의회에서는 모두 12명의 의원들이 성평등한 전남을 위한 현안과 의제를 제안하거나 의정활동 방향을 밝힌다.

김미경(정의·비례) 의원이 '성평등한 전남도의회'를 주제로 첫 발언에 나서면 김재철(민주·보성 1) 의원이 '성인지예산의 의미와 효과'를 주제로 한 발언을 이어간다. 이어 김호진(민주·나주 1) 의원이 '여성친화도시로 앞당기는 성평등 전남'을 주제로 발언을 시작하고 김희식(민주·장성 2)의원은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서의 아이돌봄'을 주제로 한 성평등 의제를 제시한다. 박경미(민주·광양 4) 의원은 '마을이 함께 아이 기

우기', 박현숙(민주·비례) 의원은 '농촌에서 맞돌봄·맞살림을 한다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오미화(진보·영광 2) 의원은 '여성 농민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전남'을 향한 현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밝히고 윤명희(민주·장흥 2) 의원은 '여성주도형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제를 제안한다. 장은영(민주·비례) 의원은 '가족친화기업에서 찾는 일·생활·균형'을 주제로 지역 기업 실태를 꼬집고 전서현(국힘·비례) 의원은 '성별영향평가 가져온 변화'를 지적한다. 한숙경(민주·순천 7) 의원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한춘옥(민주·순천 2) 의원은 '섬지역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을 밝히며 포럼을 마무리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회사 사정상, 매매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